

금융기관들, 소비자 기만 '고금리 피싱' 눈살

흔들하기 쉬운 이율 표시 예·적금 특판 광고로 현혹...업계 "영업의 일환일 뿐, 대부분 그렇지 않나"

금리 인상에 접어들며 금융기관들이 예·적금 금리를 올리는 가운데 소비자를 기만하는 '고금리 미끼 영업'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영업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 사이에선 불만도 커지고 있다.

17일 광주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광주 A새마을금고는 최근 정기예금 특판 광고 문자를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광주 5개 지점 조합원 5000여명 가운데 마케팅 수신 동의자가 대상이었다. 내용은 B지점의 경우 '선착순 정기 예탁 한시판매, 6개월→4%' C지점은 '선착순 정기 예탁 한시판매, 6개월→최대 4%'였다.

이 같은 문자를 본 고객 김모(58·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12일 해당 지점을 찾아 상품에 가입했다. 맡긴 돈은 모두 4700만원. 농협과 신한에서 각각

3000만원, 2500만원을 찾은 뒤 따로 쓸 8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3차례에 걸쳐 5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으로 나눠 입금했다. 처음엔 500만원만 예금하려다 설명을 듣고 이자 생각에 금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줄곧 맡겨둔 금융기관에서 목돈을 찾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곳에 예금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 때문에 광고 문자를 보고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한다.

예금 상품 가입 후 귀가한 김씨는 통장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새마을금고 측은 설명대로라면 처음 입금한 500만원의 6개월 만기 시 받게 될 이자가 10만원으로 표기됐던 것이다. 6개월 4% 이자면 20만원이어야 하는데 연 4%를 적용한 이자를 준다는 내용이 적

혀있었다. 김씨가 곧장 B지점으로 가 따져 물었더니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점장 등 직원들이 연신 고개를 숙였다는 것이다.

김씨는 "거래했던 은행 두 곳에서 5000만원을 찾아서 신규 거래했을 때는 그만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겠느냐. 오죽하면 이자 생각에 같은 상품을 하루에 3개나 가입했겠느냐"며 "내가 A새마을금고 B지점에서 상품에 가입할 때 바로 옆 창구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은 상품을 수천만원씩 가입하려고 상담 중이었다. 상술이라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A새마을금고 측은 "특판 광고 문자는 사실이고 해당 고객에 대한 사과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판 광고에서 언급한 '6개월 이자 4%'

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영업일 뿐"이라며 "해당 고객에게 사과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소란을 잠재우기 위한 사과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판 상품 가입 고객 규모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령층 등 금융 이해력이 부족한 시민들의 경우 6개월에 4%의 이율로 흔들리기 쉽지 않겠느냐'는 지적엔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대다수 금융기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변했다.

A새마을금고와는 결을 달리하지만, 우체국·우리은행·카카오뱅크 등 '대형은행'조차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 고리 이자를 내세운 이른바 '낚시 마케팅'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은 연 8.5~10%의 높은 이자를 주는 상품을 앞다퉀 출시했지만, 추첨을 통한 1만명 한정, 신용카드 신규 발급,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 적잖은 조건을 내걸고 있어 정작 예금 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을 팔기 위한 도구라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장마 끝...가뭄 여전 영산강·섬진강 권역 '비상'

환경부가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8월 중에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 '심각' 단계로 격상을 검토하고 있어 비상이 걸렸다.

환경부는 최근(지난 8일~16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지난 1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보령댐 등이 '가뭄단계'에서 해제됐으나, 전남 등 남부지방은 비가 부족해 댐 가뭄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은 이달 중에 가뭄 '심각' 단계로 격상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생활·공업용수를 감량할 수도 있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 받는 광주시, 순천시 등 13개 지자체와 여수·광양 산업단지 기업에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산재사망 90%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노동단체 "모든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토록 법 개정해야"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올해 들어 7월까지 총 35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 아침 가족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했다가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숨진 노동자가 1주일도 한 명 이상 발생했다는 의미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7일 노동 현장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 토론회를 열었다.

이철길 조선대병원 직업병안심센터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 이자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광주 노동청 재해발생 현황과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집계한 산업현장 사망 노동자는 광주 9명, 전남 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광주 7명·전남 23명)에 비해 각각 28%(2명)와 13%(3명) 늘었다.

올 상반기 추락 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공정률 40~90%인 지역 내 건설 현장 142곳을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92곳이 적발됐다. 사법처리는 25곳에 47건, 과태료 처분은 67곳에 1억 9500만원이었다.

토론회에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실장은 '노동안전 관련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다.

최 실장은 "7월 기준 전국 중대산업재해 104건 중, 2건 이상의 사망사고 발생 기업이 총 10곳에 달하는 등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수사와 감독 부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청 관내에서도 산재사망사고의 90%가 50인 미만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는 근본적인 산재예방을 위해서 ▲노동자 작업중지·거부권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등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윤 대통령, 친일 망언 규탄한다"

광주 시민단체,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강제징용' 발언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 충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광주 시민단체가 '친일 망언이다'고 규탄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힘든 친일 망언 중의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강제 징용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주권의 문제로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며 "우리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본의 잘못을 지적해야 옳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않고 오히려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며 추켜세우더니, 이번엔 일본의 주권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지만 일본을 걱정하며 눈치를 봐야 할 사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남구 민원실 AI 방역 로봇 운영

광주 남구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중합민원실에서 인공지능(AI) 방역 로봇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 로봇은 공기 중 각종 세균과 먼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살균방식'을 사용한다. 공기 정화 기능을 갖췄으며 화학약품이 아닌 자외선(UV-C)을 활용해 세균·바이러스를 살균한다. 24시간 자율 주행하며 살균 작업 도중 화면을 통해 공기질 상태를 안내해 주기도 한다.

남구 관계자는 "대기 중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방역로봇을 도입하게 됐다. 출입문이 수시로 열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소독제를 뿌려도 새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시골마다 '투투둑' 농민이 17일 오후 화순군 화순읍의 한 고갯로 밑에서 수확한 깨를 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남구 민원실에서 인공지능(AI) 방역 로봇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남구에 따르면 이 로봇은 공기 중 각종 세균과 먼지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살균방식'을 사용한다. 공기 정화 기능을 갖췄으며 화학약품이 아닌 자외선(UV-C)을 활용해 세균·바이러스를 살균한다. 24시간 자율 주행하며 살균 작업 도중 화면을 통해 공기질 상태를 안내해 주기도 한다. 남구 관계자는 "대기 중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AI 방역로봇을 도입하게 됐다. 출입문이 수시로 열리고 오가는 사람이 많아 소독제를 뿌려도 새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며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대지점, 통광지점, 각화지점